

불필요한 인증 23개 폐지,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혁신은 촉진한다

-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 발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25년 79개, '26년 84개, '27년 83개 검토 계획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검토대상: 1주기('19~'21) 186개 → 2주기('22~'24) 222개 → 3주기('25~'27) 246개

* 현재 운영 중인 인증제도 정보는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주기('25~'27년)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하여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 체계인증)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하였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자동차/부품 인증’ 및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7년까지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책임자	과 장	김태완 (043-870-5550)
		담당자	연구관	조춘강 (043-870-5555)



참고 1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 개요

- **[배경]** 정부는 전체 인증제도 대상 3년 주기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 운영중('19년~)

*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의 특성,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인증, 검사, 지정 등을 포함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됨

인증	검사	지정	기타	
 KC/KS 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벤처기업 확인	 에너지효율표시

- **[주요내용]** 각 부처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인증제도가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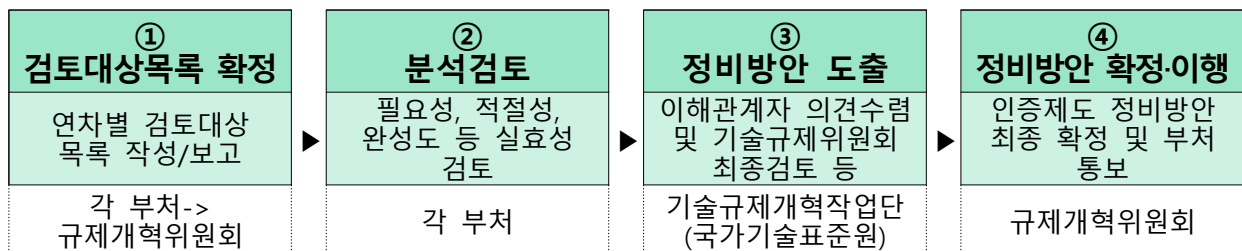
<실효성검토 항목>

필요성
▶법정제도로 유지 필요성 ▶유사·중복 여부 ▶시장에서의 인증수요

적절성
▶유효기간, 비용, 기준 등 적절성 ▶국가, 국제표준과의 조화 ▶적합성평가기관 관리 적절성

완성도
▶근거, 대상, 범위 등의 명확성 ▶사후관리 등 운영관리 절차 ▶위법사항 처벌근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절차 및 추진체계>



- **[추진경과]**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업무 법적근거 확립('18년) 및 1, 2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실시('19년~)

- 업무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정비* 및 국표원(기술규제개혁작업단)이 사전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총리 훈령** 정비

* 「국가표준기본법」('18. 6.), 동법 시행령 개정('18. 12.)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18. 12.)

- 1주기('19~'21) 186개 검토, 88개 정비안(폐지 13, 통합 4, 개선 71) 도출, 2주기('22) 64개* 검토, 50개 정비안(폐지 10, 통합 1, 개선 39) 도출

* 2주기 당초 검토대상 222개 중 '23년 79개, '24년 79개는 '24년 「인증 규제 정비」 방안(규제개혁추진단(국조실)이 인증제도를 원점 재검토)으로 대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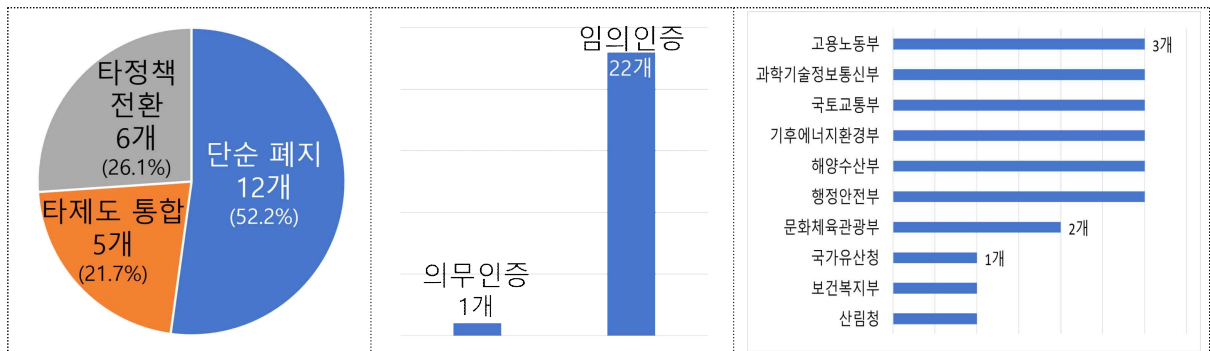
참고 2

2025년 실효성검토 결과 종합 및 주요 사례

1 검토 결과 종합 79개 중 67개 제도(85%) 정비안 마련

- (폐지 23개, 29.1%) 실효성 미흡에 의한 단순 폐지 12개, 폐지 후 타 제도로 통합 5개, 타 정책수단 전환 6개

- ▲ 사례**
- ▲ 삼차원프린팅SW 인증(과기부/임의): 폐지(기준 미제정 등 사실상 미운영)
 - ▲ 순환자원 품질 인증(기후부/임의): 폐지(동법 내 유사제도 통합 등 권고)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노동부/임의): 폐지(지정/허가제 등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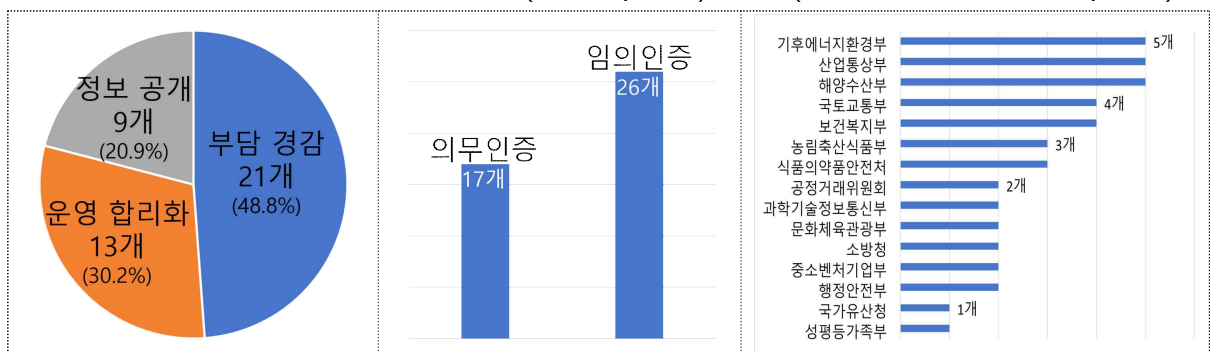


- (통합 1개, 1.3%) 목적, 대상, 기준 등이 유사한 제도간 통합 1개

- ▲ 사례**
- ▲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산림청/임의): 통합(동법 내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흡수 통합)

- (개선 43개, 54.4%) 타인증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등 부담경감 21개, 미흡 규정 정비, 파생모델 인정 절차 간소화 등 운영 합리화 13개, 인증정보 공개 확대 및 최신화 등 정보관리 강화 9개

- ▲ 사례**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공정위/임의): 개선(민간 ISO인증 결과 인정 검토)
 -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기후부/임의): 개선(신규/파생모델 동시 등록 허용)
 - ▲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산업부/임의): 개선(인증 정보 공개 확대/강화)



- (존속 12개, 15.2%) 국민안전, 국제협약 등 존속 필요 제도 12개 유지

- ▲ 사례**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국토부/의무): 존속(국민 안전 관련 제도)
 -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관세청/임의): 존속(협약국 신속 통관 등 유지필요)

2 주요 정비 사례

□ 폐지

- 운영되지 않거나 실적이 미흡한 제도, 유사제도로 대체가 가능한 제도, 적합성평가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는 과감히 폐지

1 실효성 미흡에 따른 단순 폐지

✓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과기부)

현행 3D프린팅 소프트웨어의 품질 검증을 위해 도입('16년~)되었으나, 시장 미성숙 등 사유로 인증기준 및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는 등 미운영 상태

개선 미운영 제도의 폐지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 방지** (필요시 동일 목적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내 세부품목으로 도입 검토)

✓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국토부)

현행 인증 대상이 도시/서비스/기반시설로 구분·운영되는 제도로써, '도시' 인증은 지자체(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및 '기반시설'은 실적이 미흡함

개선 '도시'인증은 국내 유사 제도와 같이 지정, 선정 등 적합성평가 외 정책수단으로 전환하고, 실적이 저조한 '서비스' 및 '기반시설' 대상 인증을 폐지 검토 필요

✓ **건강친화기업 인증** (복지부)

현행 인증 수요 및 실적(누적 67건)이 저조하며, 해외 법정인증 사례가 없으며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민간 인증과 유사하여 향후 기업 부담 가중 우려

개선 ISO 등 민간 인증 또는 관련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등 정책으로 전환을 통해 정책목적 달성 및 중복인증 해소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기대

2 폐지 후 타제도로 통합

✓ **순환자원 품질 인증** (기후부)

현행 같은 법을 근거로 동 제도와 목적, 대상, 기준, 정책 효과가 유사한 제도가 존재, 인증 실적 저조 등으로 실효성이 낮음

개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두 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등 제도 정비를 권고 함으로써 공급자 중심 제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변화** 도모

3 타 정책수단으로 전환 검토

✓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 (노동부)

현행 인증의 요건이 직원수, 최저임금 지급 여부, 직원 보험/연금 가입 여부 등으로서 전문적 적합성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제도

개선 인증제도로써는 폐지하고 **지정/허가제 등으로 전환** 후 혜택연계 등 검토 필요

□ 통합

- 정책 목적, 대상, 기준 등이 유사한 제도 통폐합

✓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통합대상: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폐지)) (산림청)

현행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는 품질 성능과 방사성 검사로 구분되며, 품질의 경우 동 제도와 중복되나 별도 운영 중

개선 동법 내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는 폐지하고 동 제도로 통합하여 **창구 일원화**를 통해 기업 **시간, 비용 부담 경감** 기대

□ 개선

- 인증방법 개선 및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① 기업 부담 경감

✓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공정위)

현행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과 기준이 유사하며, 해당제도와 비교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유효기간은 짧아 기업 애로로 작용

개선 ISO 37301과 유사·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한 인정·면제, 인증 소요기간 등 절차 간소화·단축, 유효기간 확대 등 **기업 부담 경감** 방안 검토 필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중기부)

현행 같은 법을 근거로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두 가지 인증으로 구분·운영중이나, 두 제도간 평가기준이 중복되며, 일부 기업은 2개 인증을 모두 취득

개선 두 제도 별도 운영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복 평가항목**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피규제자 **부담 경감** 조치 필요

② 제도 운영 합리화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후부)

현행 기본모델과 에너지효율이 동일한 추가모델 등록시 기본모델 등록이 선행되어야 추가모델 등록 가능(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인증의 경우 동시 등록 가능)

개선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 등 지원 기대

✓ 우수물류기업 인증 (국토부)

현행 인증 실적에 따르면 약 100여개 소수 기업만 참여, 혜택을 받는 구조로 운영

개선 소규모 혁신 기업 등 **물류기업 전반으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③ 인증 정보 접근성 강화

✓ 산업융합 신제품 인증 (산업부)

현행 제도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중이나, 인증받은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개선 피규제자 및 소비자를 위한 **인증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필요

참고 3

2025년 검토 결과 전체 목록 (요약)

※ `25년 79개 검토 결과, 폐지 23, 통합, 1, 개선 43, 존속 12개

1 폐지 (23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 검토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정비방안
1	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인증 실적이 저조하고 해외사례가 없는 등 인증 제도로 존속 불필요
2	과기부	데이터품질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인증제도 혁신 방안'('15년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라 폐지 후 재도입되었으나, 실적이 저조하고 해외 사례가 없음에 따라 민간인증 전환이 적합
3	과기부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임의	개선	폐지	(폐지) 시장 미성숙 등 사유로 미운영 상태이며, S/W품질인증과 유사/중복되어 별도 인증 불필요 (필요시 SW품질인증 내 품목으로 도입 검토)
4	과기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정책효과 미흡, 기업부담 가중 중이며, 민간 대체 수단 활용 가능하므로 폐지 (SW 기술성 평가기준 중 '별표1.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항도 인증제도 폐지와 동시에 삭제)
5	국토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인증 대상이 도시/서비스/기반시설로 구분·운영하는 제도로서 지자체 대상 '도시' 인증은 지정/선정 제 전환, 실적이 미흡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인증은 폐지
6	국토부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임의	개선	폐지	(폐지) 동법 내 의무제외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별도 운영되고 있으나 목적, 대상, 기준이 중복되며, 제도 도입('05) 후 기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는 등 미운영 상태로서 폐지 필요
7	기후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실적이 저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및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등 기존 규제 및 '실내공기질 인증' 등 민간인증과 유사/중복됨
8	기후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임의	존속	폐지	(폐지) 동법 내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의무화하는 동일 정책 목적의 규제가 존재하므로 추가 인증/지정 제도 불필요
9	문체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인증제도가 기업의 후원 확대 등 정책 목적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고 해외의 경우 세제혜택, 포상 외 인증 사례는 없으며, 동법 내 세제혜택, 포상 등으로 대체 가능
10	문체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인증제 운영에도 후원이 확대되지 않는 등 정책 효과가 미흡하고 해외 인증 사례가 없으며 세제혜택, 포상 등 동법 내 타정책 활용이 적합
11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수요와 실적이 미흡하고 해외사례가 없으며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등 타 정책 수단으로 정책 목적 달성 가능
12	행안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인증 실적이 저조하고 동법 내 다른 내진 대책 규정과 중복
13	산림청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실적이 저조하고 동법 내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제도'와 유사/중복되어 폐지 후 유사제도와 통합 필요
14	해수부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인증실적이 저조하고 해외사례가 없으며 동법 내 '유기식품 인증'제도와 유사/중복되어 폐지 후 유사제도와 통합 필요
15	해수부	수산식품명인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실적이 미흡하고, 목적, 대상, 기준이 '대한민국명장', '무형유산'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폐지 필요 (계속 운영 필요 시 유사/중복제와 통합이 권고되며, 기존 지정 명인의 지위 유지, 마크 사용 연계 방안 검토 필요)
16	기후부	순환자원 품질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실적이 저조하고 해외사례가 없으며 '순환자원 인정제'와 유사/중복되어 유사제도와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 검토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정비방안
17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동법 내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도와 대상/기준 등이 유사하여 통합 필요(인증제도는 폐지)
18	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의무	존속	폐지	(폐지) 일반 적합성평가와 달리 대상 평가 절차가 없으므로 기관이 요건을 갖추어 스스로 평가 후 지정/허가제 등 형태로 전환 검토 필요(인증제도로써 폐지)
19	행안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매회 전문교육 및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자격증제도로 전환 필요(인증제는 폐지)
20	행안부	방재전문인력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매회 전문교육 및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자격증제도로 전환 필요(인증제는 폐지)
21	해수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실적이 미흡하고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등 정책 목적 달성 효과도 미흡하여, 지정/선정제 전환이 적합
22	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의무	존속	폐지	(폐지) 기관이 요건을 갖추어 스스로 평가 후 등록/신고하는 형태로 전환 검토 필요(인증제도로써 폐지)
23	국유청	전승공예품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폐지) 공모/대회 성격의 제도로써 '한국전승공예대전' 등과 유사하므로 인증제도로써는 폐지하고 공모전 등 형태로 정책수단 변경 필요

2 통합 (1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 검토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정비방안
1	산림청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의무	존속	통합 (개선)	(통합/개선) ① 정책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제도를 통합 ② 자체검사사업장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고시 내 명확화 필요

3 개선 (43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 검토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정비방안
1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임의	존속	개선	(현행) 민간 인증(ISO 37301, 규범준수경영체제 인증)과 목적, 대상, ①인증기준이 유사/중복되며 민간 인증과 비교하여 ②소요기간(8개월), ③유효기간(2년) 기준이 높음 (개선) ① 민간인증과 유사·중복되는 항목에 대한 면제 검토 필요 ② 수시 접수/처리 방식 도입 등 소요기간 단축 검토 필요 ③ 유효기간 확대(2년→3년) 검토
2	과기부	ICT 융합품질인증(정보통신융 합 기술·서비스등의 품질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인증비용 지원사업종료('23)에 따라 기업부담 발생 ②일부 규정(유사/파생모델, 유효기간 등)이 인증 기관 내부규정으로 관리 중 (개선) ①기업 부담 우려를 검토하고 비용 지원에 대한 검토 필요 ②유사/파생모델 인정, 유효기간 부여 등에 대해 법령에 규정
3	과기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일부 인증기관에 수요 집중 ②경미한 변경에 대한 시험간소화 규정이 있고, 관련 점검표(규정외)가 있으나 일부 인증기관 누리집에서만 확인 가능 (개선) ①기존 인증기관의 인증분야 확대 ②제품변경에 대한 자가점검표 홍보 강화
4	국토부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	개선	개선	(현행) 근거 규정에 녹색건축인증 등 유사제도와 상호인정 규정이 있으나 평가기준이 상이함 (개선) 상호인정을 위해 유사제도 간 평가기준 일치화 필요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 검토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정비방안
5	기후부	가정용보일러 인증 및 검사	의무	존속	개선	(현행) ①제3자인증제도 운영 ②유사제도 간 시료 및 인정기준 상이 (개선) ①공급자적합성 체계로의 중장기적 전환 가능성 검토 ②환경표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유사제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료와 인정 기준 일치 협의 권고
6	기후부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의무	개선	개선	(현행) ①상위 법률로 하수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해 특 정공산품 사용을 금지하며, 고시를 근거로 인증받 은 오물분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②인증 소요기간이 120일로, 유사제도 대비 과도 ③시판품조사 결과 불법 개,변조 사례 지속 발생 (개선) ①인증 근거 상위 입법 필요 ②인증 소요기간 단축방안 검토 필요 ③사후관리 관련 제도 정비 검토 필요
7	기후부	환경성적표지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제도명을 통해 대상, 내용 등 확인이 어렵고, 환 경표지인증제와 혼동 ②인증심의위원회를 월 1회 개최로 신청 시기에 따라 소요기간 증가 ③유효기간(3년) 및 사후관리(매년)를 병행하여 기업 부담으로 작용 (개선) ①제도명 명확화 필요 ②인증 소요기간 및 비용 감축방안 검토 필요(심 의위 확대, 수시 평가/검토 체계 도입 등) ③ 유효기간 연장(3→4년) 및 사후관리 주기 개선 (1→2년) 등 검토 필요
8	기후부	환경표지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인증 대상 155개 품목 중 31개는 일증 실적 없 음 ②환경 및 최소한의 품질 보장과 무관한 평가항목 존재 ③유사 환경 제도 존재(고효율인증제도) (개선) ①수요없는 품목 실효성 검토 및 폐지/통합 운영 ②환경 및 최소한의 품질 보장과 무관한 평가항목 삭제 ③ 국제기준 및 기후부 유관제도(에너지효율제도 등)과의 품목조정·평가기준일치화 등 환경산업 활 성화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
9	농림부	인삼류 검사	의무	존속	개선	(현행) 인삼류 포장검사 시험항목이 과도하게 세분화되 어 운영중 (개선) 검사기준 단순화, 개체별 혼합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 등 피규제자 부담완화 필요
10	문체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학생건강체력평가와 대상, 항목 등이 유사함 ②측정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턴으로 마련됨 (개선) ①유사제도와 평가항목, 기준 일치화 등 상호 활용 기반마련 필요성 검토 ②측정 대상을 초1~3으로 확대 검토
11	문체부	우수문화상품 지정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법정 처리기간(30일)과 달리 실제 처리기간은 120 일 소요 ②사후관리가 지침을 근거로 운영되며, 지정취소 등 위법사항 처벌 규정 없음 (개선) ①법정 처리기한 현실화, 심사위 절차개선 등 소 요기간 단축 ②사후관리 규정 법제화, 위법사항 처벌규정 마련 필요성 검토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 검토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정비방안
12	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신규유형 추가시 전체 심사항목 적용 중 ②연차보고서 제출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③평가인증 취득 기관, 병원 현황과 분야가 공개 되어 있지 않음 ④평가기관 관리 규정이 없음 ⑤재인증시 일부 인증기준을 적용 중이나 관련 규정 미비 ⑥유사 해외인증(AAHRPP, SIDCER) 취득시 면제항 목 없음 (개선) ①유형 추가 면제항목 검토 ②연차보고 운영 근거 마련 ③인증취득 기관 현황 공개 ④평가기관 관리 규정 마련 ⑤재인증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 ⑥해외성적서 수용하여 유사/중복항목 면제 검토
13	복지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군 지정 관련) 유효기간 3년(군 지정) 이며, 대 상 군 지정 유지(재평가 통해 6년 간 동일군 지정) ②(기기 지정 관련) 실질적 혜택이 적어 다양한 혜택 마련 필요 (개선) ①(군 지정 관련) 유효기간 확대(4년) 및 대상 군 변경 필요성 검토 ②(기기 지정 관련)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 강화 방안 수립
14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기업규모 상관없이 일괄적 심사적용(매출 500억 이하 기업) ②실질적 혜택이 적어 다양한 혜택 마련 필요 (개선) ①기업규모별 별도 심사항목 적용 등 중소·중소기 업 대상 합리화 심사 방안 마련 ②인센티브 확대 방안 수립
15	산업부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제외 기준을 최대용량 1kg 이하로 규정하나, 주요 선진국 대비 과도함 ②형식승인 행정처리 기간은 20일로 규정 ③13개 품목군 중 1개 품목군(오일미터)에서만 " 과거 검정 합/부 실적에 따른 샘플링 난이도 변경 " 방식(국제표준 준용)을 적용 중 (개선) ①최대용량 3kg이하 가정용저울 형식승인 제외 ②소요기간 단축(행정처리기간), 검정 샘플링 방식 개선 지속 검토 ③기존 검정 실적에 따른 샘플링 차별화 방식을 모든 계량기에 확대 적용 검토 필요
16	기후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	존속	개선	(현행) ①기본모델과 추가모델의 동시 등록 불가능 ②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으로 이관된 품목이 기 운용규정 상 미폐지됨 (개선) ① 에너지효율이 동일한 추가 모델은 기본 모델 등록 시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 ②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으로 이관된 품목 적시 폐지 등 운영 효율화
17	성평등부	가족친화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유사·중복 제도 존재(캠페인 혹은 수상 형태로 운 영)로 기업부담 (개선) ①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관리하는 방안 검토 ②통합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유사·중복제도 인증기 준 상호연계에 대한 검토 ③중소기업 인증받는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정 도의 인센티브와 지원 확대 필요
18	소방청	소방용품 성능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인증기관 단일 운영으로 업무 지연 발생 ②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 수수료 책정 ③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이 KS Q 8001(제품인증 일반요구사항)의 평가항목과 유사 (개선) ①인증기관 확대 ②비용 산정의 합리성 검증 및 수수료 기준 정비 필요 ③KS Q 8001 공장심사와 상호인정 검토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 검토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정비방안
19	소방청	소방용품 형식승인	의무	존속	개선	(현행) ①인증기관 단일 운영으로 업무 지연 발생 ②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 수수료 책정 ③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이 KS Q 8001(제품인증 일반 요구사항)의 평가항목과 유사 (개선) ①인증기관 확대, 외국 공인시험성적서 인정 등 소요기간 단축 ②비용 산정의 합리성 검증 및 수수료 기준 정비 필요 ③KS Q 8001 공장심사와 상호인정 검토
20	중기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	임의	존속	개선	(현행) 동법 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확인' 제도와 절차 및 기준이 일부 중복되며, 인증기업의 약 18%가 두 가지 제도를 중복 인증 (개선) 유사제도와 중복되는 절차, 기준을 정비하여 절차 간소화
21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평가기준이 민간인증 ISO 22301(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과 대부분 부합하고 있음 ②인증업체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시설 검사 등 관리는 필요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무등록자의 위법사항 처벌근거 부재 등 사후관리 미흡 (개선) ①민간 인증(ISO 22301)을 인정하도록 규정 개정 권고 ②사후관리 정례화 및 위법사항 처벌근거 마련
22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CCM)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사실상 관련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로 타 정책수단으로 운영 가능 ②제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부재 ③민간으로 이양한 해외사례 확인됨 (개선) ①지정, 선정 등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전환 ②사후관리 마련 및 방안 정비 ③민간이양 전환 중장기적 검토
23	국유청	전통재료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제품 품질에 관한 사항으로 KS 인증과 중복 ②인증기관 누리집에서 인증대상 및 심사절차 등 세부정보 확인 불가 ③사후관리체계 관련 법적 근거 없이 인증계획 공고에만 명시 ④인센티브 없음 (개선) ①중장기적으로 전통재료에 대한 KS 품질기준 도입 검토 필요 ②인증 세부정보 공개 ③사후관리체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④인센티브 필요
24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인증 실적에 따르면 약 100여개 소수 기업만 참여, 혜택을 받는 구조조정적 구조로 운영 (개선) 소규모 혁신 기업 등 물류기업 전반으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25	농림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유사 지원 사업과 대상만 상이하여 차별성 저조, 인증제도 운영요령 등을 업무 지침 수준으로 관리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농촌관광기반사업' 등 (개선) 지정 등 타 정책적 수단 전환, 인증제도 운영요령 등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 검토
26	복지부	고령친화 우수제품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심사기준 없는 품목(5종), 실적없는 품목(20종) 운영 ②사후관리를 운영기관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시기 불명확 (개선) ①지정유지 불필요 품목 선정 및 삭제 ②지정기준·절차, 심사기준, 사후관리체계 등 제도 관련 상세사항 법제화 검토 필요
27	산업부	녹색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본 제도는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제도로 구분되며, 기업 대상 제도는 실적이 미흡하고, 유사제도(녹색기업 지정 제도) 존재 ②유효기간 확대(3년→4년) 관련 시행령이 개정('25.4월)되었으나, 고시는 개정되지 않음 (개선) ①'녹색전문기업 확인제' 제 유지 타당성 검토 필요 ②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 개정 필요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 검토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정비방안
28	산업부	단체표준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최근 5년 인증실적이 없는 품목 37개 존재 ②공장심사 주기 규정(4년) 미이행 단체 존재 (개선) ①인증실적이 없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 ②공장심사 주기 미준수 단체 지도점검
29	산업부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임의	개선	개선	(현행) ①일부 품목이 인증기준이 없으며, 수요가 없는 품 목이 다수 파악됨 ②인증 신청 시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 록 규정함에 따라 기업 부담으로 작용 ③법률 근거 없이 고시 기반으로 운영 중, 간소화 된 사후관리 절차를 시범 운영 중임 (개선) ①인증 기준 또는 수요가 없는 품목 제외 필요 ②인증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③상위법 근거 마련 필요, 시범운영 중인 간소화 된 사후관리 절차 도입 필요
30	식약처	식품HACCP 인증	의무	존속	개선	(현행) 인증 업체 수 대비 사후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 사후관리 우려 (개선) 사후관리 인력 보강 검토
31	식약처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의무	존속	개선	(현행) ①정책효과와 정책목적을 혼동 ②혈청, 혈장 등 검사 인증 기준 부재 ③타 패스트트랙 제도와 연계성 부족 (개선) ①제도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외부 공표 ②불법적 의료장비 사용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 변경 ③품목 또는 기술 확대 검토를 통한 의료신기술 시장 도입 확대 ④패스트트랙 제도와 제도적 연계성 보완
32	식약처	축산물HACCP 인증	의무	존속	개선	(현행) 인증 업체 수 대비 사후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 사후관리 우려, 식품 HACCP 대비 상이한 교육 시간 규정 (개선) 사후관리 인력 보강 검토, 교육시간 일원화
33	해수부	방류종자 인증	의무	존속	개선	(현행) 법 시행규칙에서 방류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시 미제정 (개선) 세부 인증기준 및 절차 관련 고시 제정 필요
34	행안부	유·도선 안전검사	의무	존속	개선	(현행) ①'유도선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수 수수료 등 정보를 제공하나 과거 자료를 활용중 ②검사는 각 지자체 및 해경이 실시하는 구조이며, 수수료 산정근거가 미비하고 지역별로 상이함 (개선) ①누리집 내 선박안전정보 및 수수료 조례 추가 및 최신화 필요 ②법령 내 산정기준 제시 또는 지자체별 타당한 근거를 통한 수수료 재설정 검토 필요
35	국토부	궤도시설 안전검사	의무	존속	개선	(현행) 안전검사 항목별 정보공개 미흡 (개선) 준공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에 대한 정보공개 보완
36	농림부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임의	존속	개선	(현행) 제도 관련 정보공개 미흡 (개선) 정보공개를 위한 누리집 운영
37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	임의	존속	개선	(현행)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요건에 대한 규정을 법령 외 비공개 지침(벤처기업확인기관 세부지침)을 통해 운영 중 (개선) 전문기관 관리 사항을 상위 법령으로 규정 필요
38	산업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 ①인증기업 및 제품의 현황과 인증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개선) ①인증제도 누리집 개선을 통해 인증기업, 제품의 현황 및 인증기준에 대한 정보공개 필요
39	해수부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의무	존속	개선	(현행) 시험기관별 시험품목을 각각 고시하고 있어 품목 별 지정 시험기관 파악 어려움 (개선) 소관부처 누리집에 품목별 지정 시험기관 등의 정 보 공개 필요

NO	소관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 검토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정비방안
40	해수부	선박평형수 형식승인 및 검정	의무	존속	개선	(현행) 형식승인 시험별 시험기관 정보를 지정 고시 외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피규제자 접근성 미흡 (개선) 시험기관 현황 등 인증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 하는 방안 검토 필요(소관부처 누리집 등)
41	해수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임의	존속	개선	(현행) 3개 시험기관, 1개 검정기관을 지정 운영중이나, 일부 기관에서 인증 관련 정보 미공개 (개선) 인증기관 지정품목별 형식승인 기준, 수수료, 처리 기한 등 관련 정보공개 필요
42	국토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의무	존속	개선	(현행) ①수요자를 위한 인정기업 등 정보공개 미흡 ②사후관리 수단으로서 자체평가, 문서보관 등 요 구 (개선) ①인증취득 기업현황 공개 등 수요자 접근성 확 보 필요 ②인증 요구사항 지속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유 효기간제 도입 검토 필요
43	해수부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의무	존속	개선	(현행) 일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규, 변경 고시는 하고 있 으나 그 외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음 (개선) 누리집 내 제도의 절차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정보 공개 개선 필요

4 존속 (12개)

NO	소관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 검토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검토의견
1	관세청	AEO인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 업체인증)	임의	존속	존속	상호협약국 간 무역 시, 통관 혜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존속 필요성 인정
2	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인증 및 검사	의무	존속	존속	설치 안전성 확보 및 국민 안전을 위해 현행 유지
3	국토부	내압용기 장착검사	의무	존속	존속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로 필요성 인정
4	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의무	존속	존속	국민 안전에 관한 제도로 현행 유지
5	기상청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승인	임의	존속	존속	기후변화 정책 수립 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을 위해 현행 유지
6	기후부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 대기오염 등급	임의	존속	존속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정책으로 현행 유지
7	농림부	가축의 검정	임의	존속	존속	축종별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별하기 위해 존 속 운영
8	문체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의무	존속	존속	안전성 검사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현행 유지
9	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의무	존속	존속	높은 인증실적,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제도 존속 운영 필요
10	해수부	선박 검사	의무	존속	존속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현행 유지
11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	의무	존속	존속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현행 유지
12	해수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임의	존속	존속	국제 해양환경규제 대응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이행을 위해 현행 유지

참고 4

2026년~2027년 실효성검토 대상 목록

* 3주기 검토대상: 28개 부처 246개 제도('25년 79개, '26년 84개, '27년 83개 검토 예정)

□ '26년도 검토 대상 (84개)

연번	제 도 명	담당부처	의무/임의	비고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의	
2	안전인증(S마크인증)	고용노동부	임의	
3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의	
4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의	
5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정보보호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의	
6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의	
7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교육부	임의	
8	교육시설 안전인증	교육부	의무	
9	어린이집 평가인증	교육부	임의	
1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교육부	임의	
11	채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국가보훈부	임의	
1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국가유산청	임의	
13	감항증명	국토교통부	의무	
14	건설기계 부품인증	국토교통부	의무	
15	건설기계 형식승인, 형식신고	국토교통부	의무	
16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국토교통부	의무	
17	녹색건축 인증	국토교통부	임의	
18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인증	국토교통부	임의	
19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국토교통부	의무	
20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국토교통부	의무	
2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국토교통부	임의	
22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국토교통부	임의	
23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국토교통부	임의	
24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국토교통부	임의	
2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국토교통부	임의	
26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국토교통부	임의	
27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국토교통부	의무	
2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장비 검정	기상청	의무	
29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30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GAP)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3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32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33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34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35	유기가공식품 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36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37	무대시설 안전진단	문화체육관광부	의무	
38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방위사업청	의무	
39	군용항공기 형식인증	방위사업청	의무	
40	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보건복지부	의무	
41	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	임의	
42	전자의료기록시스템 인증	보건복지부	임의	
43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보건복지부	임의	
44	산림 인증(KFCC)	산림청	임의	

연번	제 도 명	담당부처	의무/임의	비고
45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산림청	임의	
46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산림청	임의	
47	석재 우수사업자 인증(재취업, 가공업)	산림청	임의	
48	전통 석재제품 인증	산림청	임의	
49	KS 인증	산업통상부	임의	
5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산업통상부	임의	
51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산업통상부	의무	
52	석탄및석탄가공제품의품질검사	산업통상부	의무	
53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산업통상부	의무	
54	열사용기자재 검사	산업통상부	의무	
55	재제조제품품질인증 (REMAN마크)	산업통상부	임의	
5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산업통상부	의무	
57	방염 성능검사	소방청	의무	
58	소방장비 인증	소방청	임의	
59	탱크안전 성능검사	소방청	의무	
60	의료기기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무	
61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의	
6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임의	
63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해양경찰청	의무	
6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경찰청	임의	
65	갯벌생태관광 인증	해양수산부	임의	
66	관상어양식 우수사업자 인증	해양수산부	임의	
67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	해양수산부	임의	
68	컨테이너 형식승인, 검정	해양수산부	의무	
69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해양수산부	의무	
70	항만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해양수산부	의무	
71	항만시설장비 검사	해양수산부	의무	
72	해사노동직합증서 인증	해양수산부	의무	
73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해양수산부	임의	
74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해양수산부	의무	
75	급경사지 재해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행정안전부	의무	
76	승강기 검사	행정안전부	의무	
77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행정안전부	의무	
78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임의	
79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임의	
80	소음도 검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무	
81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무	
8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임의	
83	자동차 연료·첨가제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무	
84	정수기 품질검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무	

□ '27년도 검토 대상 (83개)

연번	제 도 명	담당부처	의무/임의	비고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	경찰청	임의	신규 추가 (15개)
2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	임의	
3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국토교통부	의무	
4	유기농어업자재 공시	농식품부, 해수부	임의	
5	전통문화상품 품질표시	문화체육관광부	임의	
6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임의	
7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산업통상부	임의	
8	방사성물질등운반용시설계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의무	
9	백년소상공인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임의	
10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해양수산부	임의	
11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해양수산부	임의	
12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임의	
13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무	
14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임의	
15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임의	
16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의무	
1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무	
18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무	
19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또는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의	
2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의	
21	건축설비 신기술 인정	국토교통부	임의	
22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	국토교통부	의무	
23	교통신기술 지정 (NET)	국토교통부	임의	
24	신기술 지정 (NET)	국토교통부	임의	
25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NET)	국토교통부	임의	
26	정비조직 인증	국토교통부	의무	
2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국토교통부	임의	
28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 승인	국토교통부	의무	
29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국토교통부	의무	
30	측량기기 성능검사	국토교통부	의무	
31	택시미터의 검정	국토교통부	의무	
32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국토교통부	의무	
33	항공기 형식증명	국토교통부	의무	
34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국토교통부	의무	
35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가칭)	기상청	의무	
36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인증	재정경제부	임의	
37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NET)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38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39	농업기계 검정	농림축산식품부	의무	
40	무병화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의무	

연번	제 도 명	담당부처	의무/임의	비고
41	술 품질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42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NET)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43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44	토종가축 인정	농림축산식품부	임의	
45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문화체육관광부	의무	
46	카지노기구 검사	문화체육관광부	의무	
47	국방마크(DQ마크) 인증	방위사업청	임의	
48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방위사업청	임의	
49	보건신기술인증 (NET)	보건복지부	임의	
50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인증	보건복지부	임의	
5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보건복지부	의무	
5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보건복지부	임의	
53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NET)	산림청	임의	
54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산림청	임의	
55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산림청	의무	
56	가스용품 검사	산업통상부	의무	
57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산업통상부	의무	
58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산업통상부	의무	
59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산업통상부	의무	
60	석유제품 품질검사	산업통상부	의무	
61	신기술인증 (NET)	산업통상부	임의	
62	신제품인증(NEP마크)	산업통상부	임의	
63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성평등가족부	임의	
64	지식재산 경영인증	지식재산처	임의	
65	소금 품질검사	해양수산부	의무	
66	수산물 지리적표시	해양수산부	임의	
67	수산물 품질인증	해양수산부	임의	
68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해양수산부	임의	
69	우수 천일염 인증	해양수산부	임의	
70	유기 가공식품 인증	해양수산부	임의	
71	유기수산물 인증	해양수산부	임의	
72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NET)	해양수산부	임의	
73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해양수산부	임의	
74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행정안전부	임의	
75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행정안전부	임의	
76	재난안전제품 인증	행정안전부	임의	
77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무	
78	신기술인증·기술검증(NET마크)	기후에너지환경부	임의	
79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무	
80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무	
8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임의	
82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무	
83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무	